

2014

제11권 제7호 (통권 제209호)

07

POSITION PAPER 2014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발전과제

- I.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배경
- II.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현황
- III.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문제
- IV.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발전과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발전과제

I.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배경	1
II.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현황	4
III.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문제	11
IV.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발전과제	13

■ 작 성 자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
TEL: 02-3460-0322, e-mail: yiseo@kedi.re.kr

이 포지션페이퍼는 2014년 수시과제인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I.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배경

1.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대학평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근거는 법적 근거, 원론적 근거, 현실적 근거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정부는 국·공립대학의 설립 주체이자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주체로서 각각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은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등에 재정지원을 통한 지원 육성의 항목으로 명시되어 법적인 근거를 이루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의 내재적 특성이 정부 지원의 원론적 근거가 되는데 이는 고등교육이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를 비롯해 공공재(public goods), 투자재(capital goods), 가치재(merit goods) 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학의 설립 유형별 재정운용의 특성이 정부 지원의 현실적 근거를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국·공립 대학의 낮은 국고보조금 의존도와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 의존도가 이를 대변한다.¹⁾

이러한 근거에 따라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된 법적인 근거와 함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사업과 평가를 활용한다. 이는 1990년 대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그 이전까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정부의 판단에 의한 균등배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예산이 확대되면서 희소한 공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 차등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때 차등지원의 근거는 대학평가 결과였으며, 특히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다양한 국고지원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정부 지원의 수혜를 받기 위한 대학 간 경쟁도 치열해지게 되었다.

평가연계 재정지원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를 통해 비교우위가 인정된 대학에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정부 정책이 반영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므로 고등교육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각종 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예산 배정의 목적적합성이 제고되고, 지원 결과 및 사후 조치 등이 공개되므

1) 사립대학의 재정 수입 중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을 합한 비율은 22.3%로 국·공립대학의 국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50.6%보다 낮음. 이 차이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47.4%까지 높아지는 요인이기도 하며,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총량을 확대해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함(교육부, 2014:12).

로 수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신현석, 2005:90-91).

반면,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으로 인해 정부 및 대학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첫째, 평가 업무로 인해 대학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 둘째, 사업의 형태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과 사업 간에 중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셋째, 사업단 위주의 다양한 재정투자 사업이 병렬적으로 추진되어 재정 집행의 엄격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낭비적 집행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또한 사업단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존 조직인 학부·학과·전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사업의 결과로 대학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평가연계 재정지원 방식은 대학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정부 예산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므로 미국, 영국, 핀란드 등에서는 성과관리의 형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서영인, 2013:111).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예산을 향후 GDP 대비 1.0%까지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평가연계 재정지원 방식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연계 재정지원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대학의 실질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지원 수혜여부를 결정짓는 평가체제가 타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가 운영되는 등 평가의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재정지원사업 평가 개선의 필요성

이상의 배경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그 수혜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및 영향력 증대로 관련 평가의 효율적 실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구조조정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조 이상의 예산이 고등교육기관에 지원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12년 GDP 대비 0.78% 수준인 9조 9천억 원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규모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에는 GDP 대비 1.0% 수준인 약 17조 1천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교육부, 2014:16). 이렇게 고등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국고의 규모 자체가 증가되고 지원의 주체 역시 다양해질 추세이므로 국고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특히 국고 지원 여

부를 결정하는 각 사업에 연계된 평가체제가 타당하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둘째,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정부정책 유도를 위한 관 주도의 평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의 실질적 발전을 유도하는 평가로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정책유도지표를 활용하는 경우 자칫 사업의 취지와 평가내용 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평가의 타당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제한 기간 내에 수많은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대학이 자율성을 희생해 가면서 정부 사업에 경쟁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역기능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발전을 유도하는 민주적 조성 기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에 총장선출방식, 입학정원 감축, 등록금 완화 등의 지표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항목을 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대학은 거버넌스, 정원 및 등록금 등 대학운영에 미치는 파장이 큰 요인들의 변화를 감수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즉,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대학운영의 핵심 요인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고부담 평가로 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력에 걸맞은 평가체제로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준거의 타당성, 평가방법의 공정성이 전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변화된 위상에 부합하는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러 부처가 재정지원사업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항목 중복을 회피하면서 대학의 평가업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모든 대학이 모든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각 대학이 전략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여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재정지원사업이 대학 특성화에 따른 실질적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현황

1. 재정지원 현황

고등교육기관은 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재정을 지원받는다. 2013년 기준으로 약 10조 8천억 원의 예산이 고등교육기관에 지원되었는데, 이 중 10조 5천억 원은 중앙부처에서, 약 3천 8백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였다. 중앙부처 지원 비율이 전체 지원액의 96.5%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17년을 목표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GDP 대비 1.0%인 17조 1천억 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교육부, 2014:15), 향후 중앙부처를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표 1〉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총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계
예산액	10,505,928,506	381,923,368	10,887,851,874
비율	96.5	3.5	100.0

* 출처 : 고등교육재정지원 정보시스템 통계현황 <https://hiedupport.kedi.re.kr>(14.12.8 기준)

〈표 2〉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부처별 지원 현황

(단위 : 개/천원/%)

구분	사업수	지원액	비율
교육부	93	7,408,257,123	70.5
미래창조과학부	49	1,519,522,322	14.5
산업통상자원부	24	323,346,268	3.1
고용노동부	11	318,163,562	3.0
보건복지부	36	217,559,312	2.1
기타	164	719,079,919	6.8
계	377	10,505,928,506	100.0

* 출처 : 고등교육재정지원 정보시스템 통계현황 <https://hiedupport.kedi.re.kr>(14.12.8 기준)

대학에 지원된 실질 예산 규모가 가장 높은 주요 부처들을 살펴보면 위의 <표 2>와 같다. 전체 377개 사업 중 교육부가 93개 사업을 통해 약 7조 4천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중앙부처

를 통해 지원되는 전체 예산의 70.5%로 교육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미래창조과학부 1조 5천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3천억 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약 3천억 원과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다음 <표 3>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은 <표 3>의 ‘일반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관련 사업 수는 350개, 지원 금액은 약 5조 3천억 원으로 전체의 49.5%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350여개의 사업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직접적인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평가연계 재정지원 방식을 채택한 사업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표 3>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 개/억원/%)

구분	사업수	지원 현황	
		금액	비율
일반지원사업	350	53,043	49.5
학자금지원사업	20	29,777	27.8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21	24,318	22.7
합계	391	107,138	100.0

* 출처 : 고등교육재정지원 정보시스템 통계현황 <https://hiedupport.kedi.re.kr>(14.12.8 기준)

이러한 사업들은 그 특성에 따라 지원기간을 달리하고 있는데 다음 <표 4>와 같이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된다.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장기사업이 8조 9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수 역시 259개로 전체 사업 수의 66.2%를 차지한다. 그동안 단기 소액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대학에서는 장기사업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사업의 확대는 대학의 안정적인 예산운용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여러 단기사업들이 평가와 연계되어 추진될 경우 평가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표 4〉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기간별 지원 현황

(단위 : 개/천원/%)

구분	사업		예산	
	수	비율	예산액	비율
단기사업(3년 미만)	116	29.7	1,201,755,985	11.2
중기사업(3년~7년)	16	4.1	517,140,128	4.8
장기사업(3년 이상)	259	66.2	8,994,945,205	84.0
합계	391	100.0	10,713,841,318	100.0

* 출처 : 고등교육재정지원 정보시스템 통계현황 <https://hiedupport.kedi.re.kr>(14.12.8 기준)

2. 평가실시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년 이후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이 평가연계 차등 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 오면서 2013년 기준 약 350개 사업이 일반지원사업으로 평가와 연계되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정지원사업 평가실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대학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교육부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분석하였다. 교육부 소관 사업 중 지원액의 규모와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평가연계 재정지원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35개 사업을 선별할 수 있는데 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평가항목의 구조, 수, 구성, 내용을 통해 평가항목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평가항목의 구조는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3단계로 구성된다. 다음 <표 5>를 살펴보면 사업별로 평가준거의 단계를 지칭하는 명칭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영역-항목-지표와 같이 3단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장 상위 단계는 영역, 유형, 구분, 항목 등의 표현을 쓰며 중간 단계는 항목과 내용이 가장 많았다. 상위 단계와 중간 단계의 명칭이 뒤바뀐 경우도 볼 수 있다. 또한 최하위 단계는 지표라 지칭하는데 2단계 평가준거를 활용하는 연구에도 최하위 단계는 지표라 칭하고 있다. 각 단계를 지칭하는 절대적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업별로 평가대상의 범위를 차별화하기 위해 평가항목의 포괄성 수준에 따라 구조를 체계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단계가 의미하는 포괄성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어 일관된 특징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5〉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사업별 평가항목의 구조와 규모

사 업 명	평가항목			사 업 명	평가항목		
학부교육선도대학지원 (ACE)	영역 (3)	항목 (6)	내용 (28)	세계 학술대회 지원	항목 (3)	지표 (3)	내용(7)
사이버대학경쟁력강화	영역 (2)	항목 (6)	내용 (19)	사회과학 연구 지원	항목 (5)	지표 (12)	-
입학사정관제 도입지원	항목 (5)	지표 (13)	-	녹색 성장 분야 전문대학원	항목 (4)	지표 (19)	-
글로벌인재양성	영역 (5)	항목 (14)	지표 (53)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	영역 (3)	항목 (13)	지표 (46)	지역혁신 인력양성	항목 (5)	지표 (20)	-
특화전문인재양성	영역 (3)	항목 (6)	지표 (39)	세계수준 연구 중심 대학	유형 (3)	지표 (19)	-
학문후속세대양성	유형 (3)	항목 (3)	-	학술지 발행지원	항목 (7)	기준 (8)	-
대학중점연구소	유형 (2)	항목 (7)	내용 (20)	연구윤리정보제공활동지원	항목 (6)	지표 (14)	-
기초교양교육	영역 (2)	영역 (7)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정량)	지표 (12)	항목 (22)	-
인문한국	구분 (2)	항목 (7)	내용 (12)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정성)	영역 (4)	항목 (68)	지표 (33)
선도연구	항목 (6)	내용 (10)	-	산학협력선도전문대육성(정량)	지표 (8)	항목 (12)	-
인프라 구축	항목 (3)	내용 (8)	-	산학협력선도전문대육성(정량)	영역 (6)	항목 (15)	지표 (33)
대중화	항목 (5)	내용 (8)	-	학교기업 지원사업	항목 (3)	항목 (13)	-
교육강화	부문 (2)	항목 (5)	내용 (14)	지방대 특성화 : CK-1	내용 (2)	영역 (4)	항목 (37)
토대기초연구지원	항목 (4)	지표 (7)	사항 (19)	수도권대 특성화 : CK-2	내용 (2)	영역 (4)	항목 (34)
대학중점연구소지원	구분 (2)	항목 (7)	내용 (18)	대학중심평생학습활성화지원	영역 (3)	항목 (7)	준거 (16)
학제간 융합연구지원	구분 (4)	항목 (5)	내용 (6)	교원양성기관글로벌화지원	영역 (2)	항목 (5)	지표 (14)
국내·국제 학술대회 지원	항목 (4)	지표 (4)	내용 (8)	국제협력선도대학	영역 (5)	항목 (17)	-

* 출처 : 서영인(2014). pp.43-44 참조 후 재구성.

둘째, 평가항목의 수는 최소 4개부터 최대 68개 항목까지 다양하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평가항목은 평가준거의 3단계 구조에서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재정지원사업의 평가는 재정지원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타 대학평가 준거에 비해 소규모의 핵심 평가항목을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항목 수가 너무 적거나 많을 경우 평가내용이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평가항목이 너무 적을 경우 평가의 대표성과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너무 많을 경우 사업의 취지와 무관하게 평가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규모의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것도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특징을 살리면서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표 6〉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사업별 평가항목 구성의 다양성

영역	평가항목	항목 표현의 사례		
사업 목표	대학의 비전과 목표	목표, 비전, 계획 등의 수립 (또는 설정, 논거)	(과)의	적절성, 적정성,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명확성
	추진전략 및 방안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방법, 추진내용, 육성계획		우수성, 합리성, 유기적 총체성, 정합성
	사업-대학 간 연계	타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환경변화, 지역산업		연계성, 연계의 적절성, 연계의 구체적 실천 전략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 프로그램, 연구결과, 사업결과, 사업성과	(과)의	지속가능성, 확산가능성, 파급효과, 실질성, 실현가능성, 실현정도, 기대성과
사업 운영	사업단 구성운영	사업단, 조직, 연구소 등의 구성	(과)의	타당성, 역량 및 기반, 지원계획, 육성계획
	사업단 참여인력 구성 및 역량	연구진, 인적구성, 과제추진팀, 교원구성, 참여교수, 책임자, 유치 인력, 구성인력, 사업책임자, 참여연구원		적절성, 연구업적, 수행능력, 적정성, 적절성, 적합성, 활동실적, 역량, 우수성, 성과창출 노력 및 실현정도
	예산운용	예산편성, 예산계획, 예산 및 공간, 사업비 편성, 연구비 산정		타당성, 합리성, 적정성, 규모
	추진체계	관련체제, 지원(교육) 시스템, 규칙 및 규정, 지원 체계		구축, 구축계획, 현황, 적절성, 우수성
사업 성과	성과관리체계	성과목표, 성과관리 방안, 사업성과, 성과관리체계, 성과분석, 책임성과지표, 평가시스템	(과)의	적합성, 절절성, 달성정도
	성과확산	선도가능성, 확산 및 지속 가능성, 실현 가능성, 기대성과, 결과활용, 기여도, 파급효과		우수성, 타당성

* 출처 : 서영인(2014), pp.47-50 참조 후 재구성.

셋째, 사업별로 활용하고 있는 각각의 평가항목들을 살펴보면 중복성을 찾을 수 있다.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경우 사업별로 가장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평가항목이 사업운영 체계에 관한 내용이다. 즉, 해당사업을 잘 운영할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준비도를 보는 평가항목이다. 위의 <표 6>은 이에 관한 평가항목들이 유사하게 구성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평가하는 항목들은 ‘목표 수립의 적절성’, ‘목표 수립의 적정성’, ‘비전 설정의 타당성’ 등 유사한 개념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평가항목이 구성된다. 이러한 항목은 사업 목표에 관한 항목 뿐 아니라 내용,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항목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찾아낼 수 있었다. 유사한 개념을 의미하는 상이한 표현의 평가항목들은 여러 사업에 지원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표 7〉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사업별 평가항목의 내용

사 업 명	평가 내용											
	추진 체계	사업 성과	대학 운영	교수	학생	시설	재정	평판	교육	연구	산학	국제화
학부교육선도대학지원(ACE)	○	○	○	○	○	-	○	-	○	-	-	-
사이버대학경쟁력강화	○	○	○	○	○	-	○	-	-	-	○	-
입학사정관제 도입지원	○	○	○	-	○	-	○	-	-	-	-	-
글로벌인재양성	○	○	○	○	○	-	○	-	○	○	○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	○	○	○	○	○	-	○	-	○	○	○	○
특화전문인재양성	○	○	○	○	○	-	○	-	-	○	○	-
학문후속세대양성	-	-	-	-	○	-	-	○	-	○	-	-
대학중점연구소	-	○	○	-	-	○	○	○	○	○	○	-
기초교양교육	○	○	○	-	-	-	○	-	-	○	-	-
인문한국	○	○	○	-	-	○	○	-	-	-	-	○
선도연구	○	○	○	-	-	-	○	○	-	○	-	-
인프라 구축	○	○	-	-	-	-	○	○	-	○	-	-
대중화	○	-	-	-	-	-	○	○	-	○	-	-
교육강화	○	○	○	-	-	○	○	○	-	-	-	-
토대기초연구지원	○	○	○	-	-	-	○	○	-	○	-	-
대학중점연구소지원	○	○	-	○	○	○	○	-	○	○	-	-
학제간 융합연구지원	○	○	-	○	○	-	○	○	-	-	-	-
국내·국제 학술대회 지원	○	○	-	-	-	-	○	-	-	-	-	-
세계 학술대회 지원	○	○	-	-	-	-	○	-	-	-	-	-

사 업 명	평가 내용											
	추진 체계	사업 성과	대학 운영	교수	학생	시설	재정	평판	교육	연구	산학	국제화
사회과학 연구 지원	○	-	○	-	-	-	○	-	-	○	-	-
녹색 성장 분야 전문대학원	○	○	○	○	-	○	○	-	○	○	○	○
지역혁신 인력양성	○	○	-	○	○	○	○	○	-	-	○	-
세계수준 연구 중심 대학	○	○	○	○	○	○	-	○	-	○	-	-
학술지 발행지원	-	○	○	-	-	-	-	-	-	-	-	-
연구윤리정보제공활동지원	○	○	○	-	-	-	○	-	-	-	-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정량)	-	○	○	○	○	○	○	-	-	○	○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정성)	○	○	○	-	-	○	○	○	○	-	-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정량)	-	○	○	○	○	○	○	-	-	○	○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정량)	○	○	○	-	-	○	○	○	○	-	○	-
학교기업 지원사업	○	○	○	-	○	○	○	-	-	-	○	-
지방대 특성화 : CK-1	○	○	○	○	○	-	○	○	○	-	○	-
수도권대 특성화 : CK-2	○	○	○	○	○	-	○	-	○	-	-	-
대학중심평생학습활성화지원	○	-	○	-	○	-	○	-	○	-	○	-
교원양성기관글로벌화지원	○	○	○	○	○	-	-	-	-	○	-	○
국제협력선도대학	○	○	○	-	-	○	○	○	-	-	-	-

* 출처 : 서영인(2014). pp.46 참조 후 재구성.

넷째, 각 사업별로 활용하고 있는 평가항목이 너무 다양하여 일관된 특징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사업추진과 대학운영에 관한 평가항목은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의 <표 7>을 살펴보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체계, 사업성과 두 항목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었고, 대학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경영(구조), 교수, 학생, 시설, 재정, 평판 등의 항목이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 등의 평가항목은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활용되는데 이러한 점은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최소한의 표준화된 모형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Ⅲ.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문제

최근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학에 실질적인 발전과 연계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에서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평가에 임하다 보니 장기적 계획과 성과 확인이 요구되는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부처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국가 전체 수준에서는 비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지원사업별로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공통성과 차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평가가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지원하는 정부도, 대응하는 대학도 불필요한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 즉, 사업목표, 내용,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항목들은 다수의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그 표현방법 및 의미하는 수준이 너무 다양하여 해석 상의 혼란이 초래되고 대학의 평가업무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부처별 사업들을 정리해야 전체적인 고등교육정책과도 일관성 있는 사업운영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재정지원사업 간 차별성이 평가항목으로 구현되지 못해 대학의 특성화 유도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재정지원사업 간 차별성이 평가항목에 반영되어야 대학이 전략 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특성화와 연계되어 대학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대학이 모든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최소한의 평가항목으로 수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고부담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 평가항목에 큰 차별성을 구현하기 어려운 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한 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타 사업에 선정될 확률까지 높아져 고등교육의 균형 발전, 지방대학 지원 강화, 대학의 특성화 유도 등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기조(교육부, 2013:6, 8; 관계부처 합동, 2013:138, 190)에 일치되지 못하는 맹점을 드러내게 된다.

셋째,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위상과 평가체제의 공신력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의 비공개는 평가체제의 타당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큰 제한으로 작용한다. 평가연계 재정지원사업이 350개 일반지원사업 내에서 추산되더라도 실제로 평가항목이 공개되는 사업

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일 뿐 아니라, 최근에는 수혜자격을 결정하는 평가항목에 입학정원, 등록금, 거버넌스 등 구조개혁과 관련된 정책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고부담 평가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대학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투명한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별 평가항목의 다양성과 비체계성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사업에 따라 최소 3개부터 최대 20여 개 이상의 평가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평가항목이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실제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과 범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평가항목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대학에 평가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평가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지만 평가항목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수혜자격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정성, 정량, 병용)도 사업별로 다양한데 항목별 평가방법과 평가방법 적용 비율을 공개하는 사업도 있지만 비공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이 명확해야 대학에서 평가항목별로 대응전략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간 약 10조가 넘는 국고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있다.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고등교육정책과 일관성을 제고하기도 어렵고, 후속지원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재정지원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실제로 사업마다 여건평가, 중간평가, 연차평가, 성과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현재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별로, 부처별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현황은 살펴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현황을 나타내는 수준이다. 또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특정 부처가 있더라도 타 부처의 사업에 관여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수준의 대학평가기관 정립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여섯째, 평가항목이 잘 구성되어 있어도 그것을 기준으로 실제 판단을 하는 것은 평가위원이다. 재정지원사업 평가 역시 타 평가와 마찬가지로 정성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체 평가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경우 수많은 대학이 일시에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특정 시기에 다수의 평가위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전에 평가위원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련 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평가위원 간 오차가 평가의 타당성과 공신력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 풀 구성 및 평가위원의 질 관리 역시 평가항목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Ⅳ.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발전과제

1. 기본 방향

가.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 사업들을 정리하여 유형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원 목적에 따라 HRD(인력양성), R&D(연구개발), HRD 및 R&D(공통)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대학평가의 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사업의 목적 및 성격을 이보다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교육중심 사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중심 사업 또는 R&D 중심 사업, 지역발전 및 산학협력 또는 학생들의 취·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중심 사업,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 등 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화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일관되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대학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 유도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기조로 삼고 교육, 연구, 산학, 평생교육, 국제화 등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실질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관한 정부 정책기조와 재정지원사업이 일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유형화는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기제가 될 뿐 아니라 특정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의 효과 및 성과를 평가하는데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 또한 부처별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사업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유형군이 개발될 수 있어 사업이 확대되더라도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에 혼란을 방지할 것이다. 따라서 평가항목을 정비하는데 있어 사업의 유형화를 통한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나. 평가항목의 이원화

재정지원사업 평가를 실시할 때 그 항목구성을 공통평가항목과 선택평가항목으로 이원화 해야 한다. 먼저 고등교육기관이 정부의 공공재정을 지원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검증받아야 하는 대학의 여건과 사업추진과 관련된 준비도 등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공통평가항목으로 분류하여 어떤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평가항목 중 대학의 기본 여건에 관한 내용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이 포함되며, 사업추진과 관련된 준비도의 경우 사업추진 관련 비전 및 목적, 추진체계, 성과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 평가항목들은 사업별·부처별로 유사한 이름으로 활용되는 평가항목을 정비함으로써 평가운영의 효율성과 대학의 평가업무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사업의 목적 및 특수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항목들은 선택평가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 평생교육 등 강화하고자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유형화하고, 해당 유형에 관련된 평가항목들 중에서 선택하여 단위 사업별 평가항목을 구성한다.

이러한 평가항목 중 연구지원에 관한 사업에서는 연구비 수주실적,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의 경우 학생 교육 투자 등, 산학협력에 관한 사업에서는 산학협력 실적 비율, 창업지원 현황 등을 선택평가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선택평가항목은 사업별 차별성을 확보하며, 공공재정 투자 대비 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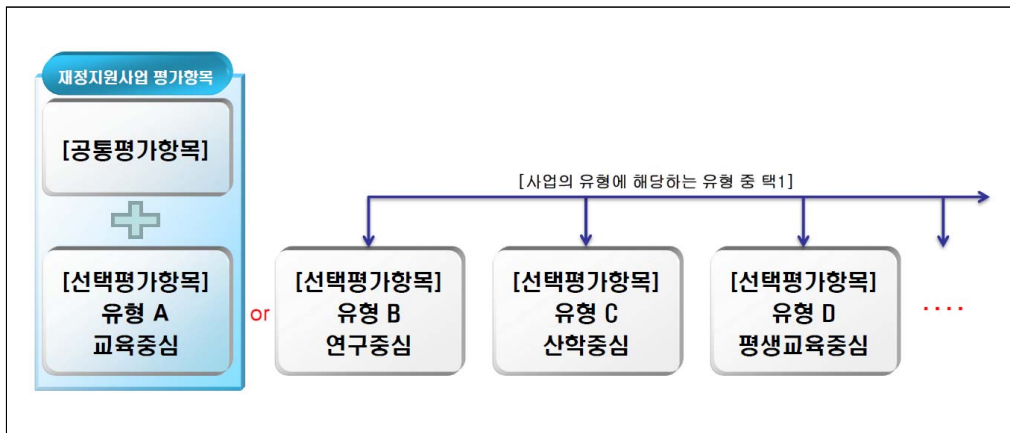
다. 평가항목 구성·활용의 표준화

사업별로 공통평가항목과 유형에 적합한 선택평가항목을 적절히 조합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활용해야 한다. 표준화를 통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검증된 평가항목들을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공신력도 제고할 수 있다.

사업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선택평가항목의 추가적인 개발이 되더라도 전체 평가체제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 주관의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사업이 향후 타 부처를 통해서도

확대될 것을 감안하면, 과학기술, 미래, 환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선택평가항목이 개발될 수 있다.

평가항목의 표준화가 필요한 것은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다양한 주체가 고등교육에 재정지원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즉, 국고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경우 각 사업별 평가의 특수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통평가항목+선택평가항목’이라는 형식의 최소한의 표준화를 준수하도록 평가항목 풀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우선 교육부 소관 사업부터 적용한 후 타 부처에도 권고하는 방식으로 평가체제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의 이원화 및 표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의 구성(안)

라. 평가방식의 유연화

여러 부처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업에 권장할 수 있도록 표준화 된 평가항목 구성을 지향하고 하위항목 구성 및 평가방법에 사업별로 융통성을 부여하여, 정부주관 평가의 획일성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활용되는 일반적인 3단계 항목 구성 중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이다. 따라서 세부평가항목이나 평가지표 등 하위항목 등은 평가주체 및 평가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평가항목별 반영비율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지

표를 사용하는 사업이더라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단위 또는 사업단, 개인단위 사업 등 지원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별 반영 비율은 유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정량·정성평가의 비율도 융통성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평가항목에 따라서 반드시 정량평가 또는 정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항목도 있지만 두 방식을 병용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2. 발전 과제

가. 평가 전담기구 지정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각 부처별·사업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학에서는 동일 부처를 통해 지원을 받아도 각각 비슷한 유형의 다른 평가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평가 유형은 사업의 수 만큼 다양할 뿐 아니라 지원 예산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어 일관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소관부처 담당자를 중심으로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 운영 및 결과 활용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보면 국고지원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전담기구에서는 국고지원 사업의 평가체제를 연구·개발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평가체제를 구축하며, 실제 평가 업무를 주관하여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공신력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총괄기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담기구 지정은 신규 설립, 기존 기구의 활용, 범부처 합동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국가수준의 대학평가기관 설립 또는 지정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수준의 대학평가기관이 운영되면 해당 기관에서 고등교육 관련 평가의 일원화 차원에서 재정지원사업 평가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평가의 차별화 및 기존 평가와의 연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중요성 및 대학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고등교육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정책 유도 지표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수많은 고등교육

기관의 변화를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자칫 사업의 취지와 평가내용 간의 괴리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특성화를 유도하는 재정지원지원 사업에서 자율적 정원감축 계획을 평가항목에 제안하는 사례도 있으며, 교육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대학의 총장 선출에 관한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등록금 인상 완화, 장학금 지급 등 대학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평가항목들이 재정지원의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 잡아 사업과 평가 간 괴리로 인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평가 간 연계가 부족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재정지원사업에 수혜를 받게 되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평가 간 차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평가 간 연계를 통해 정부 주관사업의 평가 체제가 공신력과 타당성을 제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사업의 취지와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고등교육의 중요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관련 평가를 통해 달성하되, 두 평가 간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비효율적인 평가를 방지할 수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가 올해로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평가가 준비 중이다. 대학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할 수 평가는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실시하되, 부실대학이 국고지원을 받지 않도록 재정지원 평가와의 연계를 모색하여,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사업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차별성과 특수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대학의 현재 위치나 상황을 진단해주는 평가와 달리 평가결과가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고부담 평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산 수혜 여부는 대학의 위상이나 대외적인 평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는 부족한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재원이 될 뿐 아니라 정부 주관의 타 평가 및 각종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시된다.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대한 공고에서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를 공개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평가결과 탈락한 대학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한 사례도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 특정 권역의 대학들이 재정지원사업 평가결과에 이의제기를 한 사례와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의 가산점 적용 과정에서 하위 15%에 해당되는 유·불리 현상이 발생한 사례 등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에 관한 문제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정부 주관 평가의 위상에 부합하는 공신력을 갖춘 고부담 평가를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와 관련된 사전 공지와 자세한 가이드를 대학에 제공하여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평가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절차 못지않게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모든 대학이 원만하게 동의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실시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비교우위를 결정하거나 pass/fail을 나누어야 하는 평가에서 공정한 잣대를 평가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경우 비교적 소규모의 제한된 평가항목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므로 대학의 여건이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대학의 실질적 발전을 유도하는 조성적 평가가 되어야 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인 고등교육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설립유형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유형별 분리평가를 실시하거나 설립유형별 다른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소재지로 인한 유·불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평가를 실시하고, 소재지의 평균 수준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임교수 확보율, 도서관 및 교육시설 확보율 등 비율을 확인하는 정량평가항목은 대학의 학생 수 규모를 고려하여 규모 대비 비율의 의미를 평가하는 융통성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종교계, 예체능계 및 과학기술 등 특수목적 대학의 경우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유형구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 평가위원 구성 및 질 관리 강화

350여개 이상의 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사업별로 별도의 평가위원 pool을 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평가기법이 정교해지고, 질적인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재정지원사업 평가도 예외가 아니다. 평가절차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도 최종 판단을 내리

는 평가위원의 질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평가의 위상에도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위원 pool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위원은 기존 재정지원 사업 평가위원 유경험자 또는 대학평가인증 및 각종 대학평가 유경험자를 우선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신속할 것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사로 공모 또는 추천을 받는 방법, 대학의 보직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위원 pool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국한되기 보다는 국가수준의 대학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pool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의 평가경력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바. 재정지원사업 평가 통합관리체제 구축

재정지원을 평가와 연계하는 주 목적은 국고지원의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어도 후속관리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면 성과에 대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는 사업별로 중간, 연차 및 성과평가 적용을 다양하게 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정지원사업 평가를 위한 DB를 구축하여 범 부처별로 활용할 수 있는 웹기반 평가관리 체제가 필요하다. 이는 평가위원이 활용할 수 있는 DB는 물론 대학과 각 평가주체들이 재정지원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까지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학별, 사업별, 부처별 지원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장기적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한다면 후속 사업을 배정하거나 대학의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요자가 각 대학의 재정여건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고등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대학의 간접적인 질 관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사.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제고

대학이 대응해야 하는 평가의 유형 및 부담이 점점 가중되어가고 있다. 우선 대학은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자체평가를 격년제로 실시하여 정보공시에 탑재해야 한다. 책무성 강화 기제로서 대학정보공시는 상시 운영해야 하며, 대학의 명성과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언론사 평가에도 소홀할 수 없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은 사업별로 서로 다른 평가준거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세부 평가 수는 더 많아지는 셈이다. 대학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큰 재원으로서 각각의 평가에 별도로 대비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사업²⁾만 해도 모든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학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까지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구조개혁에 관한 평가에도 대비해야 한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추진된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평가에 대응했으며, 2015년 이후에는 별도의 구조개혁평가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각 대학들은 온갖 평가의 홍수 속에서 매년 수십 개의 평가를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평가가 대부분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을 요구하므로, 대학은 많은 시간과 경비를 ‘평가 업무’ 수행에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사업 수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보다는 선정되지 못한 대학이 더 많아 평가의 실효성도 문제가 되고 이를 위해 동원되는 평가인력까지 고려하면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보공시 자료 활용의 확대, 평가자료 통일성과 통용성 제고, 평가 간 연계 강화, 평가항목 구성 및 활용의 체계화 등을 통해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평가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대학특성화(CK), 학부교육선도대학(ACE),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두뇌한국(BK)21+,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 합동(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실.
-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 교육부(2013).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 교육부 대학지원실.
- 교육부(2014).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2014.1)**. 교육부.
- 국회사무처(1998). **1999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1)**.
- 김병주(2012). 사립대학 재정지원 개선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37회 정책포럼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pp.71-96.
- 김병주·박정수·이영·나민주(2009).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포괄적 지표개발 및 재정부문의 자율성 확대방안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김화진(1999).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배분의 정책 방향. **대학교육**, 제97호. pp.11-12.
- 나민주(2009). 대학 재정배분의 쟁점과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18(3). pp.123-154.
- 반상진·김환식·오호영·채창균(2005). **고등교육재정 지원제도 개선 방안**. 정책연구과제 2005-지정-57.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서영인 외(2013). **한국 대학의 성과분석 모형 및 지표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서영인 외(2014).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송기창(2000).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9(2). pp.1-25.
- 송기창·김병주·박정수·정태화(2007). **고등교육재정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
- 신현석(2005).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서울: 학지사.
- 유현숙 외(2006).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준구(1998). 대학교육과 국가재정. **경제논집**, 37(2), pp.273-292.
- 임후남(2012).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1 고등교육 재정지원 고등교육 분석자료집**.
-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 고등교육 재정지원 고등교육 분석자료집**.
- 한유경 외(2008).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사업 성과 측정 및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Guená, A. & Martin, B.(2003). University research evaluation and funding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Minerva*, 41(4). pp.277-304.
- Hicks, D.(2012). Performance-based university research funding systems. *Research Policy*, 41(2), pp.251-261.
- Rosen, H. S. & Gayer, T.(2010). *Public Finance (9th Edition)*. New York : McGraw-Hill/Irwin.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 <https://hiedupport.kedi.re.kr>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5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한국대학교육협의회-ACE 사업 <http://eduup.kcue.or.kr/eduhome/index.do>

한국과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정보분석 https://www.kfpp.or.kr/03_ope/03_01.asp

한국연구재단 - BK21 플러스 사업 <https://bkplus.nrf.re.kr/index.do>

한국연구재단 - LINC 사업 <http://linc.nrf.re.kr/>

한국연구재단 - CK I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biz.jsp?show_no=170&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299&c_now_tab=0

한국연구재단 - CK II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biz.jsp?show_no=170&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299&c_now_tab=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교육비 관련 분석 <http://ecos.bok.or.kr/>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발전과제

발행	2014년 12월
발행인	백순근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주소	(137-791) 서울시 서초구 바우뚝로1길 35(우면동)
전화	(02)3460-0114
팩스	(02)3460-0121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등록번호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인쇄처	(사)한국장애인아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02-2272-0307)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